

# 한국의 시민, 시민사회, 시민윤리와 교회

백종국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시민사회로의 초대

2016년은 한국 사회의 시민윤리를 새롭게 만드는 역사적 계기로 기록될 것이다. 김영란법의 제정을 통해 개인 생활에서 검소와 절제를 삶의 준칙으로 삼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국가 생활에서 공의와 정직을 정착시킬 기회를 갖게 되었다. 공평과 정

직, 검소와 절제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한 해였다.

무엇보다도 연인원 1천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평화시위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시민운동의 모범이었다. 강수택이 그의 『연대의 억압과 시장화를 넘어』에서 서술한 바처럼 “온전

히 자유롭고 평등하고 개방적인 시민연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 사회에서 만연하였던 세대, 계급, 지역, 이념, 성별 갈등이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융해되는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시민윤리가 정립 되려면 아직도 많은 논의와 갈등의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극히 소수의 노인층을 중심으로 횡행하는 갖가지 루머와 주장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부도덕한 주장들조차도 보수-진보의 구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민적 견해로 포장하고 있다. 이는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비합리적 궤변과 이데올로기적 자폐증상이며 결코 시민적 견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비합리성과 이데올로기적 자폐증상이 몇몇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신앙적 수사로 포장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 한국 교회 일각에서 준동하는 반지성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소수의 세력들에 의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 전체의 사회적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건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시민윤리의 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혼란의 정리 방안 중 하나로 시민, 시민사회, 시민윤리 등 주요 개념들을 피차에 동의하기 쉬운 수준에서 간단히 정리하는 데 있다. 이와 동시에 시민사회의 한국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바람직한 시민윤리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한다.

### 시민사회론의 역사적 전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념은 역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시민(市民)과 시민사회(市民社會)는 서구에서 수입한 개념이며 근대 이전의 동양에서는 볼 수 없었다. 과거에 사용되거나 새로 개발된 신민(臣民), 국민(國民), 민중(民衆), 대중(大衆), 공민(公民), 인민(人民) 등의 용어와 유사하지만 용례가

서로 다르다. 신민은 왕의 통치에 대한 복종의 차원에서, 국민은 주권을 가진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민중은 피지배자 전체라는 뜻에서, 대중은 엘리트와의 구분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민은 정치참여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인민은 민주적 참여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주로 동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글의 핵심인 시민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국가구성에 참여할 권리 즉 시민권을 가진 정치적 주체를 의미했으며 이러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 노예나 외국인과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었다.

시민사회의 개념은 각 시대와 그 세계관에 따라 심한 이해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의 전통에 따르면 시민사회(societas civilis)는 시민권을 누리는 개인들 구성된 민주적 공동체를 의미하며 독재자가 다스리는 폭군정과 대치되는 개념이었다. 홉스, 로크, 루소, 칸트로 이어지는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 시민사회는 자연 상태 이후에 형성된 사회계약의 공동체 즉 국가를 의미하고 있었다.

국가와 시민사회를 분리하는 근대적 관점은 헤겔로부터 시작되었다. 헤겔에게 있어서 시민사회는 부르조아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공동체(bürgerliche Gesellschaft)이며 공동선을 달성하는 국가를 향해 변증법적으로 발달하는 숙제를 남겨놓고 있었다. 헤겔의 개념을 계승한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시민사회는 국가의 물질 토대이며 국가는 부르조아들의 지배기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마르크스를 계승하는 그람시, 알튀세르, 보비오 등은 시민사회로부터 국가의 자율성을 강조함으로써 유럽공산주의의 실패와 복지국가의 등장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헤겔의 영향에서 벗어나 시민사회를 공공성 추구의 결사체 네트워크로 이해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버마스, 왈저, 테일러 등은 시장 메카니즘에 종속된 개체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민(公民)으로서의 전통적 시민 개념을 부활시켰

다. 공적 의무와 권리의 주체로서 공동의 이익에 관한 문제해결적 담론의 제도화를 이끌어가는 시민의 공동체가 바로 시민사회이다.

이러한 시민사회론의 역사적 발전 과정으로 볼 때 사회체제를 정치사회, 경제사회, 시민사회의 세 가지로 분류하는 코헨과 아라토의 견해가 가장 유용하다. 정치사회(국가)에서는 정부가, 경제사회(시장)에서는 기업이, 시민사회에서는 시민단체들이 현실적인 주체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들은 각각의 영역과 조직에서 관료 혹은 국민으로, 경영자 혹은 노동자로, 지도자 혹은 시민으로 중첩적인 참여를 할 수 있다.

시민사회론의 관점에서 볼 때 시민윤리의 지향점은 분명하다. 시민은 국가구성에 참여할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회적 주체이다. 시민사회는 평등하고 공개적인 조직들을 통해 주체적이고 민주적으로 공공선을 정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이다. 시민단체는 주체적으로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조직이다.

놀라운 것은 기독교시민의 사회윤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공공신학에 대한 임성빈의 정리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공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따라서 신앙의 사사회(privatization)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공적인 삶에 기여하는 기독교시민의 윤리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 인애와 공평과 정직은 이러한 윤리적 속성이며 교회는 교우들이 기독교시민의 윤리를 실천하도록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건전한 교리는 건전한 윤리를 동반한다.

이러한 시민윤리를 기준으로 볼 때 만일 어떤 사람이 일당을 받고 시위에 참가하거나 보수를 받고 인터넷 댓글을 올린다면 그는 이미 시민이 아니다. 국가가 동원하는 관제데모꾼이며 댓글 알바로서 국가 권력에 오염된 권력의 하수인일 뿐이다. 어느 단체가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과 회비가 아니라 정부나 기업

이 막후에서 제공하는 자금으로 운영된다면 이 단체는 이미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부나 기업이 활용하는 권력 도구에 불과하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혹은 어떤 기독교단체가 이러한 일에 참여하거나 동원된다면 그 사람이나 그 단체는 이 순간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난 존재이다.

###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적 발전

한국 사회는 시민과 시민사회의 개념을 두 가지 통로를 통해 수입하였다. 첫째는 국가 그 자신이었다. 1948년 대한민국은 서구식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였고 체제의 정당성을 위해 시민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는 서구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사회과학자들이었다. 이들이 보기에 한국 사회는 이미 법적 민주주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 대중들이 시민적 권리를 이해하고 정당하게 행사한다면 체제의 민주화는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입한 개념이 실제의 삶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40여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다.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서구적 의미의 시민과 시민사회는 한국에서 구현되지 못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정부와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통치조직을 확대하였으며 한국인들을 근대적 시민이 아니라 봉건적 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무진 노력하였다. 수 백 만 명의 구성원을 자랑하는 관변단체들이 정보기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군사독재정부의 봉건적 신민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1990년대 초에 이르러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진행된 데에는 두 가지 핵심적 요인이 있다. 첫째는 이때에 이르러 박정희가 주도한 신중상주의 체제가 자체의 모순으로 붕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화, 독점화, 국제화의 구조적 모순과 지역감정전략이라는 전술적 모순이다. 도시화를 통해 무조건적으로 신중상

주요 기간별 한국 사회단체의 설립 상황

기간	관변단체(%)		시민단체(%)		경제단체(%)		합계
구한말	1	14.3	6	85.7	0	0.0	7
일제치하	1	3.3	25	83.3	4	13.3	30
해방이후 박정권까지	13	8.6	117	77.5	21	13.9	151
박정희 정권	128	21.1	373	61.3	107	17.6	608
전두환/노태우 정권	73	7.3	820	82.1	106	10.6	999
문민정부 이후	21	3.1	588	88.2	59	8.8	667
합계	237	9.6	1,929	78.4	297	12.1	2,462

출처 : 시민의신문사, 『한국민간단체총람』 1997

주의 체제를 지지하던 농촌인구가 감소되었다. 독점화를 추구하다보니 재벌이 성장하여 국가와 경쟁할 정도가 되었다. 국제화의 진행으로 외부의 압력에 취약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지역감정에 기대어 여당의 지지표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 때문에 득표기반의 항구적인 취약성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모순들로 인해 그토록 힘써 구축한 통제조직들도 점차 힘을 상실하고 있었다.

둘째는 지속적 경제발전으로 인해 중산층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동유럽의 사례에서와 같이 한국에서도 중산층의 성장은 권위주의적 정권의 붕괴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특히 한국처럼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비교적 균등한 분배를 수반한 소득 성장은 중산층을 급속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신광영의 설명에 따르면 중산층은 교육정도, 소득수준이 높으며 정치의식의 수준도 높은 편이다. 대부분 자발적이고 느슨한 시민조직에 참여하지만 권력 자원을 사용할 준비도 되어있다. 산업화 초기에는 인권운동이나 참정권운동에 참여하지만 점차 세련된 조직 하에서 전국적 연대를 갖춘 조직을 구성하고 있었다.

2000년대에 이르러 한국의 시민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 주었다. 시민정보센터가 2012년에 편찬한 『한국시민사회연감』에 따르면 2000년에 7,600개 정도였던 시민단체의 수가 2009년에 25,886개로 팽창하였다. 북

지, 환경, 정치/경제, 청년/아동, 자원봉사, 여성, 도시/가정 등 관심 영역도 매우 넓어졌다. 일종의 시민단체 붐이 나타난 것인데 이는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매우 높다는 사실과도 일치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주요기관 국민신뢰도조사” 결과를 보면 2000년대를 통틀어 시민단체가 지속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이 전후 제3세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성공한 사례가 된 데에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성장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 권력의 균형, 매개의 변증법과 협치

한국의 시민사회는 권력의 균형을 통해 한국의 밝은 미래에 공헌할 수 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국민주력기업 즉 재벌을 육성해왔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이제 극심한 양극화 현상에 허덕이고 있다. 서구의 사례처럼 복지국가가 나서야하겠지만 한국의 국가는 그러한 역할에 익숙하지 않다. 시민사회가 나서서 이 체제의 공공성 증대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체제의 붕괴는 순식간에 찾아올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해 시민단체가 정부와 재벌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공공성을 불러일으킴으로서 한국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막중하다해도 시민단체는 매개의 변증법으로 인한 자기모순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매개의 변증법이란 매개의 관계에서 매개자가



본질보다 선행함으로 나타나는 자기소멸의 현상을 의미한다. 공공선을 위한 매개자로 출발한 시민단체가 어느새 자신의 생존과 권력 확보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조희연이 지직한 바처럼 시민단체의 쇠퇴를 초래하는 “과잉정치화”는 시민단체가 시민사회 영역을 벗어나 정치사회로 진입할 때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첫째, 초심을 돌이켜보는 제도적 노력을 수시로 기울여야 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스스로를 “자살지향적 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의 사례이다. 시민적 자발성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단체는 스스로 조용히 문을 닫아야 한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사회 외부의 권력조직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 지도자 그룹을 확보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힘은 국가나 기업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인 공공적 분별력을 행사하는 데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적 신뢰가 존립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이 좋은 정치지도자를 배출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전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되 자신은 국가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시민적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세계는 이미 협치(governance)의 세계가 되고 있다. 관료기구 중심의 정부로서는 더 이상 효율적인 통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는 다양화하고 국제화되었다. 김의영의 견해에 따르면 세계는 “개인들과 사적·공적 조직들이 그들의 공동사를 관리하는 여러 방식들의 합”으로서 협치를 당연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소사가 정부와 기업 간의 조정으로 결정되었다면, 이제는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다원적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결정하는 협치의 시대이다.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전제는 시민단체들의 목표가 공공선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공선을 빙자하여 협치의 자격을 얻고서 막상 협상에 있어서는 특정한 개인 혹은 해당 단체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조직은 이미 시민단체가 아니라

또 하나의 경제단체이다.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는 공적 신앙을 육성하기 위한 주요 생태계이다. 장신근의 정리에 따르면 가정은 가족들에게 책임성, 평등, 법질서의 존중과 같은 시민적 자질의 기초 덕목을 교육시키는 시민 학교이다. 또한 교회는 제자직과 시민직의 균형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언어와 신앙적 언어의 습득하며, 시민단체들과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공적 신앙을 양육하는 장소이다. 시민단체들은 교회를 통해 조직에 필요한 자원을 얻고 동시에 교회가 필요한 사회선교의 훈련 과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 결론

자발성과 공공성은 시민의 핵심 윤리임과 동시에 시민단체의 핵심 윤리이다.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이러한 시민윤리에 익숙하지 않다. 특히 첨예한 정치 과제를 만나면 순식간에 봉건적 신민의 윤리로 추락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 주었다. 다행히 한국의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한국 시민단체 육성의 보금자리이고 시민윤리의 제공자였다.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이며 이것의 실천이 그가 가장 원하시는 바이며 민주사회가 지녀야 할 시민윤리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앞날은 매우 밝을 것이다.



글 | 백종국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서울대학원 정치학과를 거쳐 미국의 UCLA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제정치경제학을 전공하여 『경제민주화의 정치경제』, 『한국자본주의의 선택』, 『멕시코혁명사』 등의 저서 외에 수십 편의 논문이 있다. 21세기정치학회장, 희망정치시민연합 공동대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공동대표 등 학회와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김선자 여사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